

## 이라크 침공 2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 -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 한국사회 -

○ 일 시 : 2005년 3월 16일(수) 오후 1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 회 : 홍세화(EBS 시사프로 <풀레랑스> 진행자)

1부\_이라크 전쟁이 세계에 미친 영향: 예방전쟁 시대, 두 개의 수퍼파워

○ 주제발표 : 김민웅(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 토 론 : 이해정(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부\_이라크 파병논란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현실주의의 비현실성

○ 주제발표 :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 론 : 손석춘(한겨레신문사 논설위원)

3부\_종합토론

김광일(다함께 운영위원), 임필수(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국장),

정대연(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 등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 이라크 침공 2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 -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 한국사회 -

○ 일 시 : 2005년 3월 16일(수) 오후 1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 회 : 홍세화(EBS 시사프로 <돌레랑스> 진행자)

1부\_이라크 전쟁이 세계에 미친 영향 : 예방전쟁 시대, 두 개의 수퍼파워

○ 주제발표 : 김민웅(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 토 론 : 이해정(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부\_이라크 파병논란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 현실주의의 비현실성

○ 주제발표 :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토 론 : 손석춘(한겨레신문사 논설위원)

3부\_종합토론

김광일(다함께 운영위원), 임필수(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국장),

정대연(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 등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세계정세의 변화

김민웅(성공회대학 사회과학부 교수)

##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그 세계 전략적 의미

미국 부시 정권의 등장과 함께 급속하게 추진된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적 패권전략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일정하게 성취된 “미국의 제국건설을 완료하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럽 연합의 정치경제적 성장, 중국의 도전적 지위 확보와 함께 지구촌 각 지역의 반발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기구의 기능약화에 대응으로 고안된 미국의 공세적 세계전략은 현재 여러 가지 모순에 직면해 있으나 일단 잠정적인 소강기에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그 근거로 제시한 일체의 물증과 논리가 그간 모두 파산하면서, 대량살상무기 소지에 대한 심판으로 수행되었던 <테러 전쟁>이라는 목표를 <민주화전략>으로 바꾸어 자신의 군사적 행동과 세계 전략적 차원의 윤리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테러에 대한 응징”이라는 미국 개별국가의 문제에서 출발했던 전략지침을 “민주화”라는 인류 보편적 논리로 확대,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건설의 방식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국가나 체제에 대한 “내정 간섭적 공세”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제변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는 작업이 되고 있다. 이른바 <인권을 앞세운 개입주의(Humanitarian intervention)>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든가 이라크 침략 이후 후세인 정권 제거와 함께 이룬 민주화 전략의 승리라고 말하는 등의 논법은 모두 이러한 미국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략과 정세 관리의 전략변화가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이라크에서 군정기간을 거쳐 선거라는 절차상의 민주주의로 포장된 식민지 통치기구의 설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중동지역의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깔려 있는 기본목표는 “중동지역에 대한 재식민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행했던 일체의 정치변동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미국은 포장만 바꾼 제국주의 침략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안보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평화체제에 치명적 장애를 설치하고 전쟁을 위한 장치만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이라크 침략전쟁 이후 미국의 행동방식은 본질적으로 <거대자본과 전쟁주의 세력간의 파시즘적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적 세계질서를 파괴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돌아보면, 1945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거의 언제나 충돌해왔다. 이것은 실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자신을 “인권의 수호자, 민주주의의 향도국가”로 내세워왔고,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척도로 볼 때, 인권불량 내지 반민주적 국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미국 부시정권의 민주화전략논의는 따라서 기만적인 것이다.

실로 2차 대전 종식 이후, 세계사는 “더 이상의 식민지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지점에 도달했음에

도 불구하고, 미국은 “형식적 탈식민지화의 과정에서 재식민지화를 관철하는 전략”을 밀고 나갔다. 우리의 경우, 1945년에서 1948년, 이 3년의 미군정 기간은 바로 한반도 남쪽에 대한 재식민지화 전략 추진의 전개과정을 의미했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통해 이 땅의 인권, 사상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족자주의 근간을 소멸시킨 비극을 낳게 했던 것이다.

식민지였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인권”이란 기본적으로 탈식민지 체제의 형성을 통해서 그 실질적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다. 식민지 상황은 그 지역을 점령 지배하고 있는 외세에 의한 “인권”에 대한 전면적 부인”을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탈식민지 체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로 그 지역의 인권문제는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떤 차원에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라크 침략전쟁 이후 미국은 자신의 지배적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는 모습을 매우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파병을 저지하며, 이미 파병된 우리 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이러한 미국의 침략주의 전쟁정책에 동조한 결과로 인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시키는 범죄에 공범이 되지 않으려는 것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의 전쟁정책이 관철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비주체적으로 휘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이다.

## 2. 미국 내부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

그런데 이라크 침략전쟁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는 미국 내에서도 중대한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개시된 이래 미국의 국내 상황은 안보 논리, 전쟁 논리가 우위를 점하면서 인권과 기본권의 침해가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당시 부시정권의 전쟁정책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비판은 이른바 <애국주의>라고 하는 전쟁지 지 몰겔 내지는 대중선동의 대세에 휩싸여 매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인권에 대한 위협적 분위기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부통령 딕 체니의 부인인 린 체니는 대학 순회강연을 하면서 일부 지식인들이 애국적이 아니라고 공격하고, 이들이 미국의 전쟁 수행정책을 비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그 명단과 기고문 내용까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들이 테러를 비난하기보다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들의 비애국적 행동을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마치, 냉전정책에 대한 내부의 반대자들을 정치사회적으로 숙청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펼쳐졌던 50년대 맥카시 선포파, 이른바 “비미국인(Un-American)” 색출작업을 연상하게 할 정도였다. 비판적 지식인들의 자유는 봉쇄되고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목소리만 득세했던 것이다.

이후 통과된 소위 <애국법안>은 전쟁 개시 전 부시정부가 주장했던 경찰과 정보기능의 강화를 거의 그대로 담은 법안이었다. 이것은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미국 시민 사찰이나 체포 또는 구금 과정에서 판사의 개입을 최소화시킨 것으로서 정부의 의도대로 경찰, 정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법안 자체의 이름이 애국법안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안은 아까 언급했듯이 비애국적인 시민들을 색출해내는 사법적 장치이다. 반 테러 전쟁의 절대적 정당성을 외치는 미국의 현실에서 “비애국적”이라는 것은 결국 부시정권의 전쟁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전쟁 정책을 찬동하지 않은 것은 곧 테러지지자라는 이분법적 분류방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기한 구금당할 수 있기 조차해서 일부에서는 미국이 경찰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조차 하다.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 법안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법안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게 된 <국토 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는 미국이 노골적인 “안보국가”를 내세우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기, 제3세계 군부정권이 “안보국가론”을 통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켜왔던 파시즘적 상황을 미국의 틀 안에서 재현해 내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테러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경악스러운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군사재판 회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명령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를 떠나, 논리적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의 개인이나 집단도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경우, 테러 혐의를 받아 미국의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등의 기능을 압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명령조치를 취한 이유는 테러 혐의자를 일반재판이나 국제법정에 세우게 될 경우 미국에게 불리한 주장과 증거가 제시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사재판은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비밀재판이 된다. 또한 혐의의 개념 규정이나 증거채택의 기준도 모두 미국정부의 자의로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 정부가 이것은 증거로 충분하다고 하면 그것은 증거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에게 테러혐의나 관련자로 찍힌 사람은 일체의 국가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미국의 군사법정에 끌려 올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군사법정”이라는 것도 반드시 미국 본토 대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미국의 함정,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벌어진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고문과 쿠바 판타나모 미해군기지에서도 아프가니스탄 포로에 대한 인권유린은 모두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필연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진정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고, 인권은 사각지대로 몰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현실의 정확한 반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여파는 우리 사회 내부에도 영향을 끼쳐, 이라크 파병문제가 민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충분히 밟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다.

## 3. 미국의 세계전략

### (1) 지구 제국 건설을 위한 일극체제(Unipolar system)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란 결국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적 완결을 의미하는 <지구제국(Global Empire 또는 Planetary Empire) 건설>을 그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sup>1)</sup>

미국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은 바로 이러한 목표에 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강도 높게 관리할 수 있는 대단히 노골적인 “군사주의 노선”이 그 중심에 존재한다. 이는 한 마디로 고전적 파시즘의 존재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독점 대자본과 군사주의 세력의 반동적 동맹 체제(2)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프로젝트>(3)이자 <제국의 통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일체의 경쟁과 도전, 그리고 저항을 허용하지 않는, <압도적인 일극체제(unrivaled unipolar system)>의 수립에 그 핵심이 있으며(4), 그 추진 방식의 특징은 “전쟁체제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 아메리카 제국의 위력을 전 지구적으로 확인시키고, 이를 근거로 하여 <미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적 지배체제(Pax Americana)>(5)를 “인류 보편의 자연법적 질서”로 수용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여타 민족국가들의 주권과 생존, 그리고 인권은 중대한 위협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세계 전체에 대한 아메리카 제국의 독점적 지배권 행사를 위한 피라미드형 위계질서를 형성,

- 1) 미국의 전 세계 지배를 관철하겠다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전략은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92년 3월 8일자 *New York Times*가 일부 보도한 비밀 국방계획지침 문서(Defense Planning Guidance)는 *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가 추구하려는 전략의 골간과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의 기본을 담고 있다. 이 문서의 작성자는 국방부 부장관 Paul Wolfowitz로서 그는 레이건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을 중심으로 내세운, 그래서 일체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 작성에 주력해왔다. 그리고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상 지정학적 목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지역 전체를 최대한 장악하는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침략과 한반도에 대한 공략은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전략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 2) 정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여 대자본의 권력이 집중된 국가로서 파시즘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 Bertram Gross는 “미소 짓는 파시즘(Friendly Fascism)”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는 미국 사회와 정치가 대기업의 수중에 사유화되고 있으며 이로써 “대기업에 의한 노예제(corporate serfdom)”가 작동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Friendly Fascism: The New Face of Power in America*, (Boston: South End Press, 1980) 부시정권에 대한 파시즘 규정은 최근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 철학계에 서 제기하는 중요한 논란의 하나이다.
- 3) James Petras는 이러한 미국의 지배체제가, 자본의 사유화(privatization)를 지구촌 전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이루어진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한 <제국주의적 기획>을 지향하고 있다고 갈파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제국주의적 기획의 근간에는 미국 자본주의체제의 지배계급에 의한 반혁명전략과 사회보장 제도의 해체가 중심이 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정권의 세계 지배전략을 극복하는 문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각 국가 내부의 계급정치의 차원과 연결해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 James Petras & Henry Veltmeyer, *Globalization Unmasked: Imperialism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Zed Books, 2001)
- 4) Phyllis Bennis, *US Foreign Policy and the September 11th Crisis*, (New York, Olive Branch Press, 2003) 국제질서에 대한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한 필리스 베니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From their first moment in office, Bush officials brought to the White House an aggressive brand of unilateralism, characterized by disdain for global opinion and contempt for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 p. 1 미국 부시정권의 전략가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입장을 하는 언론인들은 부시정권의 세계전략 추진으로 마침내 “제국의 기회(Imperial moment)”가 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또한 앞서 언급했던 Paul Wolfowitz의 비밀국방계획 지침 문서(Defense Planning Guidance, 1992-1994)에 이미 그 골격이 정리된 개념이라고 하겠다. 냉전의 종료와 함께 미국의 압도적인 제국적 지위 확보를 향후 미국의 최대 세계 전략적 목표로 정한 것이었다.
- 5) 이 *Pax Americana*와 대조되는 개념이 *Pan-Americanism*으로서 이는 미국과 여타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자주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대륙 연방 체제를 지향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독자적 불복화를 구상했던 이러한 *Pan-Americanism*은 미국의 개입주의 전략에 의해 무너지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질서가 형성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지식인들은 특히 유럽의 제국주의 개입에 대한 방파제로 선언되었던 먼로 독트린이 이후 보다 노골적으로 <정복의 일반적 체계(general system of conquest)>로 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If the Monroe Doctrine might conceivably have been a guarantee during the past century of the ‘principle of nationalities’ against the ‘right of intervention’, it is evident today that that Doctrine...sets forth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United States as against the Latin American ‘principle of nationalities.’...” Anonso Aguilar, *Pan-Americanism: From Monroe to the Present*, (New York: Monthly Review, 1968. p. 59

유지하고 이에 다른 나라들을 미국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하위 구조로 통합시키는 폭력적이고도 강제적인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6) 그리고 그 통합에 제대로 순응하지 않는, 핵심 고리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인류적 차원의 적(악의 축/the pillars of evil)”으로 규정하고 외교/경제/군사 등의 영역에서 자원을 총동원하여 고립, 압박, 봉쇄, 포위, 공격, 붕괴, 점령, 정권교체, 식민지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게 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위계질서를 계속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그 현실적 목표가 있게 된다.

이 거대한 제국주의 프로젝트는 따라서 미국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다른 나라들과 국제법적 규약,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조직이 승인, 동조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세계질서를 끊임없이 지향한다. 부시정권은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의 최전선에 독점 대자본과 군사주의 세력의 동맹체제가 계급적, 권력적 이해관계를 매우 의식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선택하고 내세운 <국가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7)

그러므로 이러한 부시정권의 세계전략은 그 내세우는 명분이 무엇이든 부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권 내부의 주요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징과 정책사과의 차이에도 영향을 받기는 하겠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배타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체제적 합의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통제범위와 강도가 달라진 제국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비롯하여, 자신의 체제적 이해를 대리 관철할 권력구조의 수립을 위해 지배와 정복을 겨냥하는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움직임들을 목격하게 된다.

이를 단순화 시켜 말하자면, 우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문명권 전체의 가치와 안전을, 냉전 시대 이후 새롭게 등장하게 된 테러라는 야만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인류사적 책임이 강조된다. 19세기 제국주의가 내세웠던 “백인들의 의무적 책임(White man's burden)” 이데올로기의 변형이다. 부시 정권 2기의 민주화 전략은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치 내부적으로는 공격적 애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적 이견(뽀뽀)의 배제 내지는 주변화를 위한 민주적 공화정의 약화(8), 외부적으로는 미국을 선두로 한 제국 동맹의 결

- 6)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심(core)과 주변부(periphery)의 위계질서(hierarchy)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며, 이것이 하나의 세계체제의 유형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중요한 전쟁은 이 과정에서 기존의 체제를 전 환시켜 헤게모니를 새롭게 이동시키거나 또는 기존 체제의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부시 정권의 전쟁정책은 기존의 위계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새로운 체제적 도전의 발생을 저지하는 선택이 된다. Christopher Chase-Dunn, *Global Formation: Structure of the World Economy*, (Cambridge: Basil Blackwell, 1991)
- 7) Nicos Poulantzas의 경우, 파시즘을 제국주의 단계에 이른 자본주의의 위기국면의 공세전략으로 파악하고, 국가가 이 공세전략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각 자본분과의 내부적 투쟁의 장이 된다고 갈파한다. 그러한 그의 논지에 따르면, 부시정권의 내부에는 금융자본과, 오일 자본 및 군수산업 자본의 일정한 긴장과 대치상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현재의 중심은 오일 자본 및 군수산업 자본에 기울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이해가 공동으로 위협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있는 한, 리버만(Lieberman)의 경우에서 나타나듯 민주당의 부시 정권의 전쟁정책에 대한 지지는 구조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Nicos Poulantzas, *Fascism and Dictatorship*, (London: Verso, 1974)
- 8) 제국의 전쟁정책은 공화정의 권리를 포기하는데서 가능해진다는 논리는 J. A. Hobson의 제국주의론에서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다. “Finally, the spirit, the policy, and the methods of imperialism are hostile to the institutions of popular self-government, favouring forms of political tyranny and social authority which are the deadly enemies of effective liberty and equality.” *Imperialism*,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5) p. 152 Gore Vidal의 경우에도, 미국의 전쟁 체제도 공화정의 민주적 권리와 가치가 테러 위협을 막는다는 구실로 포 기되어지면서 중앙연방정부의 권한이 극대화되고 이로써 영원한 전쟁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날카롭게 갈파했다. *Perpetual War for Perpetual Peace: How We Got To Be So Hated*, (New York: Thunder Mouth Press, 2002)

속과 군사적 공격 대상이 된 지역에서의 점령정책 전개로 그 구체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2) 위기의 돌파, 제국의 방어전략

이러한 미국의 지구제국 건설 방식은 미국 역사 속에 이미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정책의 절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지난 클린턴 정권 말에 경험하고 있었던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동요와 곤경, 이에 따른 패권의 약화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축적 과정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주도권이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의 지배체제에 대한 도전이 생기자 이를 제어하는 가운데 체제위기를 돌파하려는 제국의 자기방어에서 비롯되었다. 냉전 대결주의 전략의 논리였던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 (the present and clear danger)"의 새로운 유형 앞에서 <제국의 안보>를 재정비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는 자기 방어적 수세형 전략으로 출발했던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은 9.11 사태와 그 직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승리 이후 자신감을 회복, 공격형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는 2002년 9월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보고서에 명시된 "선제공격 정책(preemptive strike strategy)"의 선택과, 이에 기초한 2003년 3월 이라크 침략전쟁의 수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자본의 자유화 전략>에 따라 통제되지 않은 투기적 자본시장의 세계적 팽창이 1990년대의 경기상승 국면을 지나 거품이 꺼지면서 부채(負債)경제가 심화, 자본축적 전략에 이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sup>10)</sup>. 즉, 국가권력으로부터 시장을 해방시킨다는 명제 하에 "노동에 대한 규제 강화, 자본에 대한 규제 해제"를 통해 세계화 논리를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 세력의 발언권이 위기국면에서 약화되고 이들의 퇴각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1999년 미국 대선이 낳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정질서 위기까지 논란이 되었던 대선을 통해, 일극적 체제의 군사적 확보를 세계전략의 기본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신보수주의 세력의 소위 선거 쿠데타에 가까운 전격적인 권력 장악은 다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즉, (1)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협약, 그리고 국제적 협력 체제를 통해 미국 자본의 지위를 강화해왔던 신자유주의 노선의 한계가 드러난 것, (2) 유럽의 급속한 정치경제적 통합, 독자적 군사 블록 조성 움직임과 중국의 성장에 따른 도전이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 상황<sup>11)</sup>, (3)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토 의정서(Kyoto Treaty)나 전쟁범죄 처리를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 등 미국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이 나타난 상황 등이다. 보수 세력의 최종 보루인 대법원의 선거판결은 바로 이러한 현실

9) "The United States has long maintained the option of preemptive actions to counter a sufficient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To forestall or prevent such hostile acts by our adversaries, the United States will, if necessary, act preemptively."

10) Paul Sweezy의 경우, 이미 1980년대 말, 미국 경제가 부채경제의 부담(debt explosion)과 통제력을 잃은 투기자본의 운동(dizzying spiral of speculation)으로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게 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을 정확히 예견했던 바가 있다. Paul Sweezy & Harry Magdoff, *The Irreversible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1988)

11) Robert Brenner는 미국 경제가 1970년 대 이후 지속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빠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유럽 경제의 통합적 역량의 도전 앞에서 위기에 처해 세계경제의 체제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시정권의 군사주의 체제는 이러한 체제변동의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하겠다. *The Boom and the Bubble: The US in the World Economy*, (London: Verso, 2002)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이루어진 체제적 논란과 합의의 결과였으며, 그래서 신보수주의 권력 등장은 합법성을 획득했다.

신자유주의 노선의 문제는 통제되지 않은 투기자본의 과잉에 따라 수차례의 연방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될 만큼 자본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되었고<sup>12)</sup>,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기구가 반세계화 운동을 무시하기 어려워진 현실에서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 등의 경제현실이 파국적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은 각 지역 경제의 독자적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노골화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세계전략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조치를 강구하는 쪽으로 기울어갔던 것이다.

## (3) 그 전략적 핵심 과제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미국 지배계급의 위기의식이 날카로워졌고, 미국에 도전하는 일련의 세계적 동향을 일거에 통제하고 제국의 위력을 새롭게 다지는 보다 강도 높은 선택이 절실했다. 이는 지난 2차대전 종결과 함께 확보했던 미국의 주도적 패권체제를 그대로 온존시키고 더 나아가 냉전이후 "진영 적대전선이 소멸한 현실"에서 대적(對敵) 결집력이 떨어진 아메리카 제국의 지배질서를 재편성, 지구촌 전체에 걸쳐 전면화하는 작업이 된다.

따라서 부시 정권을 통해 등장한 이들 신보수주의 세력의 지정학적 전략의 중심 과제는 매우 분명해진다. 즉, 제국 동맹 내부에서의 압도적 지위와, 제3세계 지역의 노동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골자가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도전이 용납되지 않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 보유와 실제적 과시", 즉 <전쟁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시 정권의 전쟁정책을 중심으로 한 세계전략이 처한 가장 중요한 딜레마는 평화의 시기에 전쟁의 논리와 폭력체제의 강화를 합리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2차대전이 끝난 이후 평화가 도래하자 군사경제의 활력이 무너지면서 위기에 직면한 미국 자본주의체제가 전쟁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NSC-68"을 통한 군비증강정책 논리의 연장이다.<sup>13)</sup> 평화가 충분히 가능한데 전쟁을 하려는 체제, 그래서 이에 대한 국제적 문제 제기는 끊임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미국은 무리한 선택을 하다가 그것이 결국 미국 자신의 곤경을 초래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12) Federal Reserve Bank는 최근 또다시 이자율 인하정책을 통해서 투자축진을 강화하려하고 있는데, 투기 거품 이후 형성된 부채경제의 극복이 어려운 상태이며, 미국 정부 자체가 적자재정의 위기에 처해 있어 시장 조정력이 상당한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Robert Gutmann은 미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부채의 증가를 막아내지 못하는 신용체제를 비롯하여 투기적 자본시장의 성격이라고 갈파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 자본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미국의 세계 경제적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How Credit-Money shapes the Economy: The United States in a Global System* (New York: M.E. Sharpe, 1994) "The preceding process of credit overextension now explodes into the open in the form of bankruptcies, loan defaults, and creditor panics. Speculative bubbles, built on expectations of continuously accelerating inflation, burst as expected price increases suddenly fail to materialize. These incidents of financial crisis spread pessimism, paralyze lending activity, and force spending cutbacks." p. 47.

13) Containment: Documents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1945-1950, ed. Thomas H. Etzold & John Lewis Gadd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참조, 평화 시기에 전쟁경제를 촉발하기 위해 전쟁공포를 이용한 경우를 분석한 책으로 Frank Kofsky의 *Harry S. Truman and the War Scare of 1948: A Successful Campaign to deceive the n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그리고 냉전전략의 구체적 구상과 추진 세력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서는 Jerry W. Sanders의 *Peddlers of Crisis: The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Boston: South End Press, 1983)가 있다.

즉, 정당성을 상실한 전쟁의 추진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한편으로는 국제적 반전연대가 강화되는 것과 함께, 거짓의 양산과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로써, 겉으로는 공화정의 민주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현실에서는 제국의 행동을 보이는 모순으로 파괴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내부의 비판과 저항은 필연적이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이민자와 외국인의 민권을 제한하는 <애국법안(Patriot Act)>이나 의회의 견제력을 떨어뜨리고 중앙연방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며 민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적지 않은 <국토 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 신설, 그리고 전쟁기간 중에는 거짓 정보 확산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언론의 협조적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식의 논리(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제작, 내외의 언론기관과 정부에 확산시키는 이른바 심리전 수행에 필요한 전략 영향국, Office of Strategic Influence 설치 논의)는 모두 이러한 미국 사회의 공화정적 가치의 위기를 보여준다.

오늘날 미국 부시 정권의 전략을 선도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 즉 네오콘은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이 패배주의에 빠졌다고 보고, 강력한 군사주의에 의존하여 미국의 세계적 패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 위에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근본적으로 인권이나 생명, 평화와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겠다.

#### (4) 부시체제의 전략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보고서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문서는 냉전시대를 승리로 이끈 미국의 힘이 이제 역사상 전례 없이 강력해졌으나, 새로운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평화,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 자유 무역 체제 등을 보호, 인류적 번영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 전략보고서는 9.11 이후 미국의 변화한 전략의 요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지난 60-70년대의 “안보국가론(National Security State)”의 확대이자 헨리 키신저가 미국의 국가적 역량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남고 처지는 힘(surplus of power)”<sup>14)</sup>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겠다.

이 전략 보고서의 핵심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등장한 현실에서 “필요하다면 <선제공격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대목으로서, 이는 단지 하나의 전략 선택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에 대한 내외적 규제는 해체하고, 자신의 통제력은 강화하는 가운데 국제질서와 미국 내부의 정치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9.11 이후의 변화된 현실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부시 정권의 세계 지배전략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던 바이며, 9.11은 그러한 주장의 현실적 근거를 마련해준 계기일 뿐이라고 하겠다.

미 국무부 정책 기회국장을 지낸 후 <외교위원회(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sup>15)</sup>의 신임 회

14) Henry Kissinger,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Toward a Diplomacy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A Touchstone Book, 2001) 키신저의 외교개념은 나폴레옹 이후의 유럽에 대한 반동적 봉쇄동맹체제인 메테르니히의 신성동맹 전략에 기초해 있다. *A World Restored, Metternich, Castlereagh and the Problem of Peace, 1812-1822*,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따라서 그의 논지에 따른 미국의 외교정책이란 반체제적 대안(anti-systemic alternative)에 대한 봉쇄 포위 전략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영향력이 여전한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사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으로 자리를 옮긴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의 경우, 지난 2000년 11월 “제국 아메리카(Imperial America)”라는 제목의 짧은 논문을 발표, 이제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초강대국이라는 역할을 넘어서서 세계 전체를 통괄하는 제국의 위치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의 정치체제를 그에 맞게 다지는 일이 관건(Imperialism begins at home.)이라고 하면서, 군사력 강화와 정보기관의 통합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시시켰다. 리처드 하스가 부시 정권의 주요 정책 책임자였다는 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점령정책의 정책적 지휘자였으며 아버지 부시 정권 하에서 안보보좌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부시 정권의 정책 사고를 잘 보여 주는 보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1997년에 출간된 그의 책, <주저하는 보안관, 냉전 이후의 미국 (The Reluctant Sherif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sup>16)</sup>>에서 이미 그 골격이 정리된 바 있다. 그는 여기서 냉전 이후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세계를 다시 미국의 규제(regulation) 아래 두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동맹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하고 실현성이 있다면(if necessary and feasible)” 단독적으로라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제도에 묶인 “경찰”과는 달리,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진 “세계 보안관”으로서 이제는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신보수주의 세력 내부의 강경파인 존 볼튼의 유엔 대사임명은 미국의 국제적 행동반경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제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리처드 하스의 이러한 개념들은 “규제”가 자본에 대한 규제로만 이해되었던 신자유주의 논법에서 다른 나라들의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바뀌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규제조치로서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서 “필요하다면” 선제공격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식화되었다. 또한, “국토 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 창설에서도 나타나듯이 제국의 안전은 내부에서 시작한다는(Ultimately, the foundation of the American strength is at home.) 논리로 앞서 지적한 바대로 공화정의 원칙들을 제국의 목표를 위해 규제하는 체제를 지향함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리처드 하스의 아메리카 제국 프로젝트의 군사주의 노선은 그의 1999년 재개정된 그의 책 <개입: 미국의 군사력을 탈냉전 시기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Intervention: The Use of American Force in the Post-Cold War World)<sup>17)</sup>>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명분으로 하여 군사적 개입이 정당함을 역설하고, 그에 따라 그 대상 국가의 “국가건설(Nation building)”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는 명백한 채식민지화 전략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겠다.

이 국가건설 과정에서 그는 일체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점령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맹체제가 필요한데, 이는 럽스펠드의 언급대로 “목적이 동맹을 규정하는 것이지 동맹이 목적을 규정하는 것이

15)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미국의 독점 자본의 대외정책 요구를 이론화하는 현장임을 Laurence H. Shoup & William Minter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다. *Imperial Brain Trus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New York: Monthly Review, 1977) 리처드 하스의 외교위원회 회장 직 이동은 미국의 단독적 외교행위가 점차 동맹세력 내부의 지지를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는 자신의 국무부 재임 시와는 달리, 동맹세력 구축을 통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전략을 취할 움직임이다. 이는 부시정권의 일방적 군사주의 노선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16) *The Reluctant Sheriff: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7)

17) *Intervention: The Use of American Force in the Post-Cold War World*.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아닌(the mission determines the coalition. The coalition must not determine the mission.)”, 그래서 미국의 판단기준과 행동반경, 능력이 제한 없는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폴 윌포비츠(Paul Wolfowitz)의 “1992-1994년 국방계획지침 문서”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정리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시정권의 전략사고에서 우리는 전쟁, 점령 등의 정책이 근본적 틀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실로 철저한 반 인권적, 반 평화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 (5) 미국 대외정책의 지정학적 차원

부시정권의 세계전략은 지정학적 편제로 보면,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점으로 하여 세 가지 위계 수준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일본을 포함한 유럽을 미국이 이끄는 동맹체제 내부에서 주니어 파트너 지위로 유지하는 것, 둘째, 한국 등 중간급 국가들을 종속적 하위 단위로 통합하는 것, 셋째,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지역을 미국의 직접적 지배영역으로 관할하는 것 등이 된다. 그리고 넷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 내부로 편입하도록 하는 압력을 꾸준히 가하는 것이다.

즉, 미국을 최고 지휘부로 하는 서구 제국 동맹체제의 견고화와 이에 종속 의존하는 중간급 국가, 그리고 자원과 노동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력의 대상이 되는 제3세계 지역이 하나의 통합단위가 되며, 중국 등이 이에 맞설 것인지 아니면 편입되어 자신의 위치를 미국의 의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정하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세계적 자본축적 전략(아메리카 제국주의에 의한 영원한 착취지배구조)의 원활한 구조 형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계질서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그 기반이 되는 제3세계 지역의 자원과 노동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과시가 된다. 중동지역의 원유 장악은 단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정책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타 국가들, 특히 유럽의 독자적 노선을 규제하는 매우 중대한 고리가 된다.<sup>18)</sup> 이라크 침략전쟁은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유로(Euro)화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정치경제적 결속과 군사적 독자성을 막고 미국의 동맹체제 내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라고 하겠다.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은 반전평화 운동의 연대라는 각도에서보다는, 그러한 미국의 전략 목표의 거부였던 것이다.

제1차 부시정권 시기 걸프전쟁의 전략 목표도 탈냉전의 기류를 타고 당시 경제적 통합과, 나토(NATO)와는 별도로 독자적 신속 배치군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유럽을 견제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 구도 속에 이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결속 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동의 적”을 부각시키고 전쟁정책을 정당화하면서 제국 통솔의 주도권을 장악해나갔다. 미국의 세계전략 구도 속에서 소위 “악의 축”이란 이렇게 보자면, 그 대상 국가의 속성 자체가 악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국 통합 전략에 순응하지 않은 주요 고리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악”의 규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의 결속을 위해 필요한, 그 고리에 대한 고립, 봉쇄 전략의 정당화 근거로 작용할 뿐이다.

한반도 문제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포함하면서도, 동북아시아 전체의 결속을 저지하고 중국이나 일본이 이 지역의 독자적 맹주로 역할하게 되는 것을 사전

에 방지하는 작업의 사슬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중동지역과는 달리 자원의 문제 보다는 지정학적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장악이 성공하게 될 경우, 미국은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원화가 달러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장래의 기축통화로 나서게 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동북아시아의 독자적인 군사적 블록화를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했던 지난 2002년 10월의 상황은,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로써 동북아시아 전체의 대미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이 지역이 미국의 주도적 영역에서 이탈할 수 있는 조짐을 보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여, 전체적으로 부시 정권의 세계전략의 특징을 총괄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냉전 시기에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기존의 국제법적 규제나 국제조직 내부의 논의구조가 이제는 자신에게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시,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단독적 일방주의를 내세워 각 지역 국가의 역할을 위계질서화하고 이들을 자신의 세계제국 체제 내부에 편입, 통합 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는 “탈냉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위협에 대한 문명권 전체의 공동대응의 긴박성”이며, 자신은 이러한 문명권 전체의 가치를 수호하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의 사명 의식을 가진 국가라는 것이다. 인권과 자유, 그리고 문명과 시장을 지켜내는 존재로서 미국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최근의 민주화 전략론에 그대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시 정권의 세계전략은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현실에서 그 자체가 도리어 정작의 인류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죽음, 폭력적 지배와 점령, 그리고 야만을 결과하고 있다.

한반도는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폭력체제의 위협 앞에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제국의 점령 질서 유지와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폭력체제의 강화로 압축되어 있다. 거듭 논하거니와, 우리의 인권적 기초인 생명은 제국 미국의 국가적/경제적 목표를 위해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폭력적 질서에 분명하게 저항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다.

#### 4. 한반도의 현실에서 주목해야 할 바

한반도는 지난 50여 년간의 정전협정체제를 통해서 전쟁체제의 일상화를 경험해왔고,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의 제국지배전략의 하위 단위로서 자국권 상실의 국가적 지위를 강요당해왔다. 지난 냉전 시기의 군사주의 체제가 한반도의 현대사를 장악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제국경영상식의 소산이었다.

군부정권의 존재는 우리의 정치적 후진성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재식민지화 전략의 결과였다. 해방정국에서 우리는 식민지 잔재를 척결하며 인권이 보장되며 자주적이고 통일된 국가를 지향했다는 사실만 주목해도 미국의 압도적 지배전략이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제국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 식민지 시대 파시즘 세력을 복원,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관계를 확대재생산해온 미국의 전략은 우리에게 역사적 고통의 근원이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우리의 기본 인권과 민족적 생존권, 외교적 주체성, 민족 내부의 평화적 결합,

18) Peter Gowan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그는 미국이 과거 냉전시기에 각 지역에 행사했던 주도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미국의 세계전략상 가장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은 변화한 현실을 수용하여 이에 합류하기 보다는 자신의 질서에 다른 나라들을 복속시키려는 무리를 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US Hegemony Today”, in *Monthly Review*, July-August 2003



사회경제적 정의 등의 사안은 제국의 문제와 결부시켜 정면으로 제기하여 이를 우리 민족 전체의 당연한 권리로 내세우기 어려웠다. 모든 것은 제국의 질서 내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그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스스로의 안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안전판으로 이해하는 심각한 착각현상을 낳고 있으며, 미국의 요구 앞에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상황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실상은, 그 질서 안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생존을 위기에 몰아가는 사태가 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은 여타 지역의 민족들의 생존권을 주변화하고 있으며<sup>19)</sup>,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어떤 명분을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물리적 폭력의 대상으로 희생시킬 수 있고 자신의 강제적 통합전략의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을 “공동의 적”으로 몰아 전쟁정책을 정당화하는 반 평화적 본성을 가졌다. 미국의 지배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인권과 평화의 근본적 진전은 이루어 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서의 기초인 한미동맹체제는 폭력과 희생을 양산하는 제국의 질서 안에 우리를 종속적으로 묶어두는 장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로부터의 이탈(de-linking)<sup>20)</sup>을 계획, 세계적 평화역량과 연대하여 평화체제의 새로운 성립을 구상하여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배전략의 중대 고리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전체적 정세를 살펴보면 그 진상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 중심에서 일본과 동맹 체제를 구성하여 아시아의 분열과 중국 포위 전략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미 동맹은 이러한 미-일 동맹의 하위 체계 내지는 한-미-일 동맹으로 이어지는 고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삼각 동맹체제의 본질은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보장하고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 전략을 추진하는 것에 압축된다.

이러한 전략구도에서 한국이 요구받고 있는 역할은 (1) 미국의 전략적 지휘체계에 계속 복속될 것 (2) 일본과의 군사적 연계가 심화될 것 (3) 아시아적 연대의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말 것 등이다. 즉,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부에 분열과 갈등, 그리고 적대적 모순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동북아시아 질서의 군사적 패권체제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우리가 동원되고,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전략에 우리의 국토가 군사기지화 되는 상황은 모두 이러한 흐름과 맥이 통해 있다.

즉,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지만 한다면 “한반도 전체에 대한 폭력적인 재식민지화”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에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제국건설 전략에 한반도가 대상이 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인권적 가치와 현실을 수호하는 근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강요한 자본의 지배를 극복하는 문제, 신보수주의 세력이 강제하고 있는 전쟁의 가능성을 포함한 군사주의 정책을 철폐하는 문제, 그리고 민족적 단합을 저해하는 분열정

19) Edward Said의 표현에 따르면, 이로써 제국의 지배 하에 있는 민족들은 중심국가의 이해에 봉사하며 자신의 삶은 주변화(marginalized)되고 생존의 기본권리는 박탈(dispossession)되어가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권리(self-determination)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갈파했다. 이는 지난 50년의 세월 속에서 미국의 전쟁체제에 간헐 있는 우리 민족의 형편을 그대로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olitics of Dispossession: The Struggle for Palestinian Self-Determination, 1969-1994* (New York: Vintage Books, 1994)

20)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일극적 제국주의의 착취와 폭력에서 벗어나 다극적 세계(Polycentric World)를 지향하는 이탈의 결단을 촉구한 사미르 아민은 경우, 이탈 이후의 연대라는 보장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의 질서에서 이탈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세력과의 연대와 협력을 동시에 마련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Samir Amin *Delinking: Towards a Polycentric World* (London: Zed Books, 1990)

책과 이를 보조하는 이데올로기적 유산을 소멸시키는 문제 등이 다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실로 미국이 이렇게 동북아시아 질서의 재편과정을 주도하는 전략구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적 대외정책의 결정권을 가지며 군사적 대치선이 붕괴되고 새로운 평화체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사태가 만일 그렇게 전개되면 미국이 유지하려는 식민지 체제의 붕괴는 물론이고 대북 적대전선을 비롯하여 중국을 겨냥한 일체의 제국관리체제가 동요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일정하게 퇴각을 요구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간의 우호적 결합에 주도적, 주체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저지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에 봉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력 또한 마찬가지로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달리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독점 대자본의 지배체제와 이를 유지하는 군사력의 존재, 그리고 주권국가의 선택을 견제하는 아메리카 제국의 질서와 맞서는 작업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우리의 역량을 동원하려는 요구에 반대하고 동북아시아를 전쟁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일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용기와 의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

거대한 폭력 체제 앞에서 결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일개음을 일으켜 나가면, 역사는 어느 지점에서 해결의 고리를 풀어내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이다. 평화는 그저 외치기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켜내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침략전쟁으로의 파병 이후 한국 사회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1. 이라크 파병결정 과정

○ 제1차 이라크파병: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전 발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는 높은 파병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파병을 결정 (3월 21일, 국무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0일자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파병을 결정한다고 밝힘. 4월 2일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공병과 의료지원 부대 중심으로 650여명 파병. 4월 30일 1진 출발.

○ 2003년 9월 4일, 미국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공식 요청하였다 (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 부시대통령은 9월 7일 미국민에 대한 연설과 9월 23일 유엔 연설을 통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게 이라크 추가 파병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 미국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 지역의 치안 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 독자의 한국군 사단 혹은 한국군 중심의 다국적군 구성이 가능한 규모의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구. 미 국방부는 모술 지역에 배치한 제101 강습사단을 대체할 경보병 병력을 요구 (산악계릴라전에 대비한 특수부대를 요청한 것임).

○ 9월 24일 정부, 이라크현지 조사단 파견, 조사 부실과 조사결과 왜곡으로 논란 증폭.

○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의 파병요청에 대하여 파병 수락의 뜻 시사 ("파병문제 검토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 10월 18일 정부, 파병방침 발표. 12월 14일 4당 대표회동, 추가파병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합의.

○ 2003년 12월 17일,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지원할 3,000명 이내의 병력을 추가파병'안 확정 발표. 추가 파병부대의 성격이 '평화·재건지원부대'라는 점 확인. 이라크의 특정지역을 독자적으로 맡아 재건지원 업무를 수행하되, 치안유지 업무는 이라크 군·경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추가 파병부대는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로 구성하기로. 파병규모는 3,000명 이내로. 파병 지역과 시기는 미국과 협의하기로.

○ 2004년 2월 9일, 파병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04년 3월 19일, 한·미, 한국군 파병 주둔지 변경 합의 (아르빌), 5월 17일 미,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공식 통보, 6월 8일, 유엔안보리, 이라크 주권이양 위한 새로운 결의안 통과, 6월 10일, 여야 국회의원 90명 추가파병 전면 재검토 서명, 6월 17일 열린우리당 추가파병 당론 재확인, 6월 18일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개최, 추가파병 최종확정.

○ 2004년 11월 29일, 국회 국방위, 이라크 현지조사활동.

○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상정 통과.

## 2. 한국의 이라크 파병의 실태

○ 3천명의 대규모 추가파병국은 한국뿐이며 현재 이라크 주둔군 규모에서 미국, 영국 다음의 세계 3위 규모의 점령군. 한미동맹 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규모 1000명 이상의 군대를 파병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철군시한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한국군만 철군시한, 출군조건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언급도 없이 1년 연장을 준비하고 있음.

○ 재건지원 활동의 여건이 좋지 않아 36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주둔이 불필요하다는 점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이라크의 정부 수립의 불안정성은 외국군 주둔을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유지할 것임.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저항이 확산)될 경우 한국군 주둔에 대한 이라크인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 존재. 이 경우 한국인에 대한 테러가능성 증대될 가능성 존재.

○ 2003년 5월 민간단체 한국인 활동가 1인 민병대원에 억류당한 후 석방, 미군 하청업체 직원도 억류당한 후 석방 등 총 5건 12명 납치 (김선일씨 1명 사망). 동년 11월 30일 파견업체 직원 2명 피격 사망, 2명 부상. 2004년 4월 8일 한국인 목사7명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된 후 석방. 2004년 6월 무장조직 김선일씨 납치, 살해.

## 3. 침략전쟁으로의 파병이 사회에 남긴 짐

○ 사실적 법적 근거 등 일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부재한 동맹정책: 침략의 명분이었던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개발설은 미국 의회에서조차 정보조작임이 이미 밝혀졌고 덴마크의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사임하는 일도 발생했으며, 사담 후세인 정부와 알카에다 간에 어떤 연관성도 확인된 바 없다는 것도 미의회 9·11 조사기구에서 확인되었음. 한국군이 이라크에 주둔해야 할 일체의 사유가 합법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음. 추가파병의 경우도 동의안은 "전후 이라크의 재건지원과 평화정착"을 명시하고 국방부는 "한국군 추가파병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의 참여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라

크는 사실상 미영군과 전면적인 게릴라전을 벌이는 중. 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발발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함.

○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의 정당화가 '테러리즘'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사실 인식상의 혼란을 야기: 침략의 정당성 문제를 목살/왜곡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상황을 '테러리즘' 관련으로 해석, 침략과 점령으로 인한 수많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살상 등을 외면하는 반윤리적이고 왜곡된 상황 인식을 조장 (예: 2004년 3월 대통령 육사 졸업 및 임관식 연설문에서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 현지 반응 언급 및 한국군 2004년 6월,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에서의 테러리즘 언급 등. 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발발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와 육군3사 제38기 졸업 및 임관식 연설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함을 분명히 언급함.)

○ 책임의 부재: 한국 정부에는 이라크 침략을 지지한 근거와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는 기관 및 관료가 아무도 없음. 잘못된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책임구조가 부재.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사실이 확인된 후 고문학대 조사단을 파견한 호주 정부와 달리 3대 점령국인 한국의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이라크인들의 생존과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임. 이 역시 잘못된 정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부재.

○ 균형잡힌 상황인식과 윤리적 판단의 부재: 이라크 침략의 직접적인 결과로 대규모의 민간인 살상이 발생하고, 팔루자 등지에서는 미군에 의한 사실상의 민간인 학살이 발생함.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 및 노약자. 또 미영 연합군 관리하의 이라크인 수감시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야만적인 고문·학대가 자행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 학살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음.

○ 사실상의 점령군으로서의 역할: (1) 침략 명분의 허구성, (2) 한국 정부의 미국지지 입장 천명, (3) 3위 규모의 파병국, (4) 이라크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민간인 학살 등의 침상에 대한 침묵과 정책 부재, (5) 미미한 파병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상, (6) 점령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저항의 확산과 체계화를 종합해 볼 때, 한국군은 사실상의 점령지원군으로서, 그러므로 사실상의 점령군으로, 그러나 할일이 없는 군대로 주둔하는 중.

(국회 국방위 이라크 현지조사단 (2004. 11. 29) 참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주민 상대로 차량수리, 태권도 보급, 호떡 제공 등의 봉사활동을 하던데, 그 일이 그렇게 수많은 군인들이 거액의 돈을 써가며 해야할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 군의 현지 역할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저 후방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평.)

○ 테러 위협성 증대로 인한 한국 시민의 안전 및 국익의 훼손: 김선일 사건 및 이라크 침략 이후

알카에다 및 연계망의 활동 증대로 볼 때, 미국의 이라크 침략 및 점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가 직접적으로 시민 개개인의 안전을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국익 훼손 야기. 특히 점령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무장저항이 확산되어 한국군이 이른바 '민사작전'에 투입될 경우, 한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은 대폭 증대될 것임.

○ '재건지원' 사명의 불가능성: 한국군이 파견된 쿠르드지역은 (1) 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2) 때문에 국방부가 주장하는 '재건지원 소요'의 근거가 희박하며, (3) 쿠르드족 대부분이 자체 민생치안유지 병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외국군의 치안유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4) 쿠르드민병대의 무장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바로 대규모 무장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이며, (5) 향후 구성될 이라크 민간정부가 이 지역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아직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 등에서, '재건지원' 목적으로 한국군이 주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이라크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주장의 허구: 미국 주도 연합군에 대한 현지의 매우 부정적인 여론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게릴라전 방식의 저항의 확산으로 볼 때, 전투병 중심의 한국군 파견은 이라크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함. (미국과 이라크의 대학 연구기관들의 한 공동연구에 따르면 이라크전쟁 여파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엄격하게 추정해도 약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결론내린바 있음. 영국 의학주간지 '랜셋'의 보고, 2004년 10월 29일)

○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는 주장의 허구: 스페인, 온두라스 등 파병했다가 철군한 나라, 추가 파병 계획을 취소한 불가리아 등, 이라크 점령의 명분 및 자국의 현실과 여론을 감안하여 파병계획을 변경한 나라 다수. 잘못된 근거와 정보에 기초한 파병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에 해당되지 않음.

○ 시간끌기를 통한 무책임과 판단착오의 연장 - 파병연장동의안: 파병연장동의안은 (1) 파병의 목적과 현실성 및 비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지 않고, (2) 예산의 구체적인 용처가 적시되지 않고, (3) 자이툰 부대의 임무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지 않고, (4) 예산 부담 등 미군과의 부담 분담 규정을 담고 있지 않으며, (5) 파견 근거로서 헌법 제5조 제1항 '침략적 전쟁' 부인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이라크 침략이 침략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음.

○ 정책 수립 기관들을 지배한 잘못된 관념: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꿰어진 파병 정책은 정책 수립기관들이 허황된 관념을 지배를 받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 대표적으로, (1) 이라크 문제에 관한 미국의 주도력에 대한 과신, (2) 미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사회 및 아랍권의 반발에 대한 경시, (3) '묻지마 파병'이 '북핵문제' 해결에 유리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측, (4) 점령 후 이라크 상황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 (5) '전후 재건' 명분으로 이라크 상황의 반윤리적 측면을 상회할 수 있다는 기술관료적 편의주의, (6) 한미동맹을 미국추종과 동일시하는 패배주의, (7) 외교에 윤리적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조야한 현실주의 등.

## ○ 요약

- 현 정부의 파병외교에는 정보 조작과 오판이 가득찬 대신, 민주 정부에 합당한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 수립과정이나 외교철학 또는 일관된 외교노선이나 기준은 찾아보기 힘들.

- 침략전쟁과 외국 점령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두고 초기의 판단착오와 자국 민간인보호의 소홀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지는 기관이나 인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 주둔국인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점령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상황에 눈감는 반윤리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음.

- 일부 야당과 수구세력의 압력이 높은 여건이더라도, 심각하게 '전쟁 진행중'인 이라크 상황은 한미 동맹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과 국제사회의 동향으로부터 파병 재검토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잘못된 관념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외교안보 마인드의 변혁이 필요하며, 실리외교 못지 않게 윤리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4. 남은 과제

○ 초기의 높은 파병반대 여론은 현재 수그러들었고 파병문제는 이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에서 완전히 밀려난 분위기.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면 다음의 숙제를 처리해야 함.

○ 정보 왜곡 조사 및 책임자 문책: 파병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는 정보의 왜곡과 오판에 대한 정책 책임자들의 무책임 구조임. 때문에 파병결정 초기에 (1) 이라크와 테러리즘의 연계설, (2) 사담 후세인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설 (3) 이라크 침략의 정당성 등을 제시한 정보 왜곡 책임자와, 이후 파견지 조사과정에서 모술지역과 키르쿠크지역 등 현재 극도로 불안정한 지역을 '안정된 지역'을 평가한 국방부 조사단 책임자, 그리고 아르빌 지역에서 재건지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보분야 책임자,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이라크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한 정보분야 책임자에 대한 정보 왜곡 조사와 문책이 필요함.

○ 이라크 실태 종합 조사와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한국군이 사실상의 점령군으로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와 민간인 살상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해야 함. 정부는 이를 통하여 국민이 한국군 주둔국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함. 충분한 정보와 국민적 여론 수렴을 통해, 파병 정책을 한미동맹 관련 사안과 분리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실질적 재건 지원 사업 준비: 치안유지 목적으로 군대 파견은 완전한 민정

이양을 통한 완전한 독립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이라크의 민간정부가 온전하게 전쟁 책임을 논의 과정에서 군대 파견과 별도로 '전후 재건 지원' 제공할 준비를 할 수 있음. 할일 없는 군대의 주둔을 연장하는 것을 불필요.

○ 철수 전략 (exit strategy) 수립: 파견 부대의 지원재건 사업을 민간 주도 인도적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최근 '국민 여론'에 반해서 외교정책을 펼 수 없으며 "미국 의견에 대해 반대된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다룰 때가 있"으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하며, "무력행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대통령의 뜻이 파병 정책에도 가감없이 반영되어야 함.

○ 참여정부 외교노선의 윤리적 기초 수립: 중진국 한국의 외교가 한미동맹과 같은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큰 문제. '대테러전쟁'과 같은 패권국가 주도의 국제 의제에 원칙을 갖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분명한 '실리 외교' 대신 '윤리적 외교'를 천명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과 인도주의법 및 평화의 원칙에 따라 매 외교사안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파병 정책 결정과정에 '현지 인권영향 평가' '갈등해소 잠재력 향상 평가' '당사자 영향 평가' 등을 도입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강대의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차단하는 장치로도 이용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외교당국과 시민사회단체간 에 윤리적 외교원칙 수립을 위한 집중적인 의사수렴이 필요함.

## 5. 파병논란의 함의

한국 정부의 파병 합리화는 몇 가지 핵심적인 주장으로 요약된다. 초기에는 재건지원론, 즉 '전후 복구'를 위한 비전투부대의 파병이라는 주장을 주로 제기했고, 이라크의 상황이 보다 상세히 알려지고 국방부의 부실, 왜곡 현지조사가 알려지자 이후에는 불가피론, 즉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를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국익론, 즉 파병으로 중동지역에서 경제적 특수를 기대하겠다는 것을 앞세웠다. 경제적 실리마저 불투명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 이후에는 한미동맹론, 즉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총체적 국익이라고 설명했으며 김선일씨 피랍살해 이후에는 "테러의 위협에 굴복할 수 없고 국제사회와의 역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파병과 파병연장을 강행했다.

정부의 파병 추진을 아주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리도 깊이도 설득력도 일관성도 없었다. 완전한 침묵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는 '단순한 억지' 이상의 설명을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누군가 무심히 '우리가 왜 침략당한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야 하지?'라고 물으면 정부의 온갖 현란한 설명보다는 '미국이 시키니' 까라는 답이 더 자명하다. 파병 이전까지 이라크는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인식상으로).

이러한 '설명 불능상태'는 언뜻 보이는 것 보다 심각한 함의를 갖는다. 설명 불능상태는 정부의 대외

정책에 불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 '의문'의 파장을 가져온다.

이라크전쟁 이후 몇몇 여론 조사에서 미국이 북한보다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테러리즘'의 위협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회의 새로운 주역들은 빅 브라더를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위협'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국가가 공식 설정한 위협의 규정과 어긋난다는 것은 위협한 사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사태도 아니다. 특히 국가의 공식 위협 설정이 한미동맹과 같은 국제 체제의 정당성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 동맹 성립이후 처음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맹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동맹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남북화해 과정의 시작 이후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파병 논란의 전환기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다고 보인다. 한미동맹의 진면목을 화학반응처럼 드러낸 것이다. '위협'의 인식이 변화하니 산성과 알칼리성의 비중이 바뀐 것이다. 한편의 설명 불가능상태와 다른 편의 '이반'과 같은 이러한 징후는 한국의 국가와 사회가 민주화 과정을 통해 겪고 있는 전반적인 전환기적 성격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한국전쟁을 통해 성립된 분단체제와 안보국가체제를 일컫는 1953년체제가 19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급격한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른바 '53체제'의 전환기를 통해서 새로운 '평화'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반발이나 새롭고 넓은 다양한 수구세력들의 혼란스러운 반발 역시 전환기에 나타나는 기독교층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주화는 우역곡절을 겪지만 큰 흐름에서 시민사회의 확대와 성숙을 가져온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심화는 가장 심하게 막혔던 언로, 즉 북한과 미국에 대한 자유로운 담론의 경쟁을 허용한다. 북한은 생사여탈의 위협적인 존재에서 지원 또는 협력의 상대로 바뀌었고 새로운 사실확인파 새로운 인식의 형성을 통해 우리 사회는 북한과 미국의 '재발견'을 새로이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긴장이 발생한다. 한편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지속되는 반면 남북관계는 '탈안보'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마찰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적 긴장은 안보주의와 생리가 맞을 수 없는 자유로운 시민사회로 하여금 평화담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

동시에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체제에서 억압되었던 군, 군비, 군사활동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예를 들어, 과도한 국방예산의 문제, 공격용 무기도입 등 공격적 군사정책의 문제, 강대국에 종속된 군사동원, 북한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핵무기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그렇다. 과거의 군사정책의 관행이 새롭게 윤리적인 조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끊임없이 평화운동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과 미국의 '재발견'에 공통적인 면은 안보의 시각에서 윤리적 시각으로의 전환이다. 안보의 시각과 비교할 때 윤리적 시각은 보편성과 의사소통성을 갖는다. 즉 민주화 담론과 친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발견'과 '재인식'은 의미있는 파장을 예고한다. 최근의 평화담론과 평화운동은 동북아시아의 맥락에서 '안보체제' '안보정치'와 직접 긴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전화기와 연관된 것이며 이 전환기의 전환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 '작아' 인식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의 진로와 관련해 사회적 질문 내지 도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와 '그들'에 관한 것이며 그 관계에 관한 것이다. 때문에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정체성은 민족의 기원 등 스스로의 원천 또는 환상에서 만들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과의 만남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정체성의 정치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퇴보를 포함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국익 인식, 위협에 대한 인식,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평화운동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립관계의 해소와 미국과의 수직적 동맹관계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안보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국가, 다른 사회, 다른 역사와의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각국과 각 사회가 서로와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를 전망하며 제기하는 것이다. 안보주의는 대체되지 않고 해체될 따름이다. 단기간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안보와 관련된 정당성의 위기를 수반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한 국가에서 발생할 때 그 파장은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의지를 갖들인 전망을 한다면, 현재 한국 사회가 (나아가 북한사회 및 남북한과 관련된 주변국의 정책 분야에서도) 1953년 분단체제의 정당성 위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 정당성에 도전하는 사회적 실천이 상당한 윤리적 논리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파병반대운동과 같은 '한미동맹'의 구태의연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은 앞으로 큰 파장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끝.